

11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참고자료

◇ 금융개혁의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
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「기자 간담회」 개최 (9.2일, 10.1일 既개최)

I. 10월의 금융개혁

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(제12차 개혁회의, 10.14)

- 보험상품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, 이자율
규제 단계적 폐지 등 보험산업 혁신 방안 마련
- ➡ 보험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

②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(제12차 개혁회의, 10.14)

- 대형증권사 신용공여 확대,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
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투자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저변 확대
- ➡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
③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 (제13차 개혁회의, 10.29)

- 국제 감독기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도입하고 합리적 이유없이
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를 정비 (예: 저축은행·여전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)
 - ➡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
- ※ 영업행위(11월) → 시장질서·소비자보호 및 금융규제운영규정 제정(12월)

④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(제13차 개혁회의, 10.29)

-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, 안정화 추이를 보아
가며 서비스 수준,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
- ➡ 금융거래 편의 제고 및 은행 선택권 확대

* 이용실적(10.30~11.3일 3영업일간, 만건) : 접속 26.6, 변경 4.3, 해지 8.0

⑤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(제13차 개혁회의, 10.29)

-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,
중후장대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
- 다만, 민간금융기관 경쟁하는 과정에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,
관성적 운용과 한계기업 등 지원 장기화 등 비판도 제기
- ➡ 정책금융의 보수적·관행적 운용을 타파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하여
창의·기술 기업과 미래성장 동력 지원을 확대할 필요

< 기업은행·산업은행 쇄신 >

- ①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기업은행은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
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
- ② 기존 주력산업(중후장대)에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원의 중심을
이동하고,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
- ③ 아울러, 정책금융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회사를 신속히 매각하여
새로이 재투자하는 등 정책금융 선순환체계를 구축

< 40년만에 정책보증제도 大 개편 > → 금일 11시 금정국장 브리핑 예정

- ① 창업·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
연대보증은 전면 면제함으로써 모험적 창업을 활성화
- ② 창업단계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
위해 장기로 보증(5년이상)을 공급하고,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
- ③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보증심사를 은행으로 이전하는
'위탁보증'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축소
- ④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(창업/성장/위탁/안정)을 통해
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 대응

⑥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선 (지속 추진중)

- ① 예금담보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(10.5, 현장점검반 건의과제)
* (현행) 카드사, 은행, 저축은행 → (개선) 신탁, 우체국 등 체크카드 발급 금융사
- ②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(10.6)
* 보장한도(최고 5천만원) 내에서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(현행 1년내) 보장 등
- ③ 허위·과장 금융광고 감시·감독 강화방안 (10.12)
* 광고시 준수해야 할 “체크리스트”를 금융회사에 제공, 금융협회가 회원사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감시 노력 강화 등
- ④ 보험금 누락 지급시 지연이자 추가 지급 (10.12)
*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지연시 ‘지연이자’를 최고 8.0%까지 추가 지급

II. 11월의 금융개혁 추진과제

- ① (금융민원·분쟁처리 개혁방안) 금감원 처리시스템의 신속성·효율성 강화 및 금융회사의 해결 역량 확충 유도
- ② (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연금화 확대방안) 개인·퇴직 등 사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
*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혁회의 상정 예정
- ③ (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)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권 자산관리서비스의 근본적 개혁 추진
- ④ (영업행위 규제개혁) 업무범위, 자산운용, 상품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 기준에 맞추어 정비 ※ 시장질서·소비자보호 규제(12월)
- ⑤ (온라인 보험슈퍼마켓) 보험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비교·검색하고 계약 체결 단계로 연결
- ⑥ (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) 과도한 수리비·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부담이 저가차량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개선

참고 금융이용자소비자 대상 현장점검 운영현황

- ① 중소·벤처기업, 상장(준비)기업 대상 현장점검 (10월중 실시)
 -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이용자 및 소비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
 - 이에 「금융개혁 현장점검반」은 10월중 중소·벤처기업, 상장(준비)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
* 중소·벤처기업 → 위원장 참여 중소벤처기업대상 10.20일, 중소기업협회 10.30일
상장(준비)기업 → 10.27 ~ 10.28일, 증권유관기관 포함
 - 금융회사가 금융이용자·소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 금융회사 관행개선 차원에서 ‘현장경보’를 발령
* 포괄적 근저당 관행,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시 불이익 처분 사례 등에 대해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점검 및 지적시 엄정조치(10.20일)
- ② 금융소비자 대상 현장점검 (11월 중)
 - 금융소비자는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사항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
 - 업권별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으로 금융소비자 「현장메신저」를 구성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
 - * 그간 소비자실무협의회·금융민원실(금감원),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민원도 총괄하여 점검
 - 11월 중 업권별 「현장메신저」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향후 상기 기업·소비자 등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

Ⅲ. 11월중 주요 금융현안

1. 기업 구조조정

- ◇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「옥석가리기」를 신속하게 하는 것임
 -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살리고
 - 지속가능하지 않는 기업은 빨리 정리하여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것임
- ◇ ①엄정한 기업신용평가, ②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, ③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추진
- ➔ 기업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있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경제를 살리는 것임

- (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) 투자대상 회사를 11월내 선정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본격 착수
- (철강·석유화학·해운업 등 취약업종) 「정부내 협의체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,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 예정
- (여신제도 선진화 기본방향) 은행연합회 주도로 TF*에서 구조조정 원칙·절차·방식(Model)·관련 조직 등 시스템 정비, 구조조정에 대한 Incentive 부여와 Disincentive 제거 등 여신제도 관련 개선 추진중

* 금융위, 금감원, 은행연, 금융연, 산은·수은·시중은행으로 구성, 연말까지 운영 예정

2.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

- (동향)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
 - (중도금) 분양시장 호조로 '15.1~9월 대출 증가액(9.1조원)이 '14년 증가액(3.1조원)의 3배에 육박
 - (이주비)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'15.1~9월 대출증가액(3.4조원)이 '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'12년(1.6조원)의 2배를 상회
- (평가)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
 - 최근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음
 -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은 이를 검사하려는 것이 아니며,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차원
 - 다만, 앞으로 주택시장 및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기재부, 국토부, 한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

3. 국회 입법 추진현황

-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협조 지속 추진 중
- 서민 금융부담 완화,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, 핀테크 활성화, 기업구조조정과 소비자보호 등 주요 금융개혁 과제 뒷받침

< 주요 법안 내용 >

법안명	제출일 및 제출자	법률안 주요내용
자본시장법	15.9.3, 이진복 의원	◦ 거래소지주회사 개념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
대부업법	15.6.9, 신동우 의원	◦ 법정 최고금리 인하 (29.9%) ◦ 대부업협회 감독근거 마련
기업구조조정촉진법	15.5.11, 정우택 의원	◦ 한시법인 기축법의 일몰연장 및 미미한 부분 보완
전자증권법	15.10.23, 정부	◦ 증권의 발행, 유통 등을 모두 전자화
여신전문금융업법	15.10.7, 정부	◦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
은행법	15.7.3, 신동우 의원	◦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지분보유 한도 규제 완화 등
전자금융거래법	15.7.7, 신동우 의원	◦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
휴면예금법	14.12.29, 정부	◦ 서민금융진흥원 신설
주택금융공사법	15.3.4, 이운룡 의원	◦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◦ 주금공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
금융소비자보호법	12.7.6, 정부	◦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본법 체계 구축